정리해고 분쇄!
비정규직 철폐!
야권연대 반대!
혁명정당 건설!

혁명

총선특보 3호
발행일 : 2012년 3월 22일
발행처 :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주소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3가 70번지 3층
블로그 : blog.jinbo.net/wrp

노동자들을민주당의 지지부대로 몰아넣는 야권연대

민주당과 통진당이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1:1 선거 구도를 형성하기 위해 지역별 후보 단일화를 완료했다. 지난해 진보정당들의 통합에 관한 대의원대회 논란들과 국참당-민노당-노심조의 통합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논란들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 지도부들이 가고자 하는 최종 종착지는 결국 민주당 중심의 민주대연합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드러나고 있다.

애초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내걸고 출발한 민노당이 국참당과의 통합도 모자라 이제는 민주당과의 연립정권을 위한 군불때기에 들어간 것이다.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적들과 반MB 선거연합이라는 미명으로 노동자의 독자적 정치세력화 열망을 무참히 짓밟고 있는 것이다.

통진당이 아직은 완연한 부르주아 정당으로 변신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길로 나아가고 있음을 지난 3-4개월의 과정에서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민주당과 통진당의 단일후보 경선 과정을 보라. 부르주아 정당간의 경쟁 방식이 야권연대 이름으로 완벽히 재현되고 있다.

야권연대의 추악한 그림자

2010년 현대차 비정규직 점거파업을 파괴한 이경훈 금속노조 현대차 전지부장이 울산 남구에서 통진당 내부경선에 나와 현대차 사장과 함께 찍은 명함을 돌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반노동자적 작태가 활개 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통진당 내부 경선에서는 이 문제가 불거지지 않고 쉽게 넘어갔다. 과거 민노당 내부 경선과정에서 주소지 옮기기 등의 온갖 편법 선거운동이 묻혔던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관악구 이정희 의원과 김희철 의원의 단일후보 경선과정에서 벌어진 문자메시지 사건은 민주당과의 경선이라는 조건으로 인해 김희철 의원 쪽의 폭로로 불거졌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본가적 경쟁이 후보 경선과정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김희철 의원 쪽에서도 비슷한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이 언론에 의해 폭로되고 있다. 한마디로 진흙탕 싸움이다. 노동자, 시민들은 표 찍는 대상으로 전락된 지 오래다.

이에 대해 조국, 탁현민 같은 통진당 지지자들은 이정희의원이 빨리 사과했다면서 두둔하고 있다. 이른바 진보진영의 도덕적 수준이 이명박의 기준에 맞춰져버린 것이다. 한나라당을 성추행당이라고 비난한 것이 총선 후보 결정과정에서 통진당에게 돌아왔다.

통진당은 성추행 사건을 은폐하는 데 앞장섰던 전교조 전위원장 정진후 후보를 당선안정권인 비례대표 4번에 배치했다. 피해자 지지모임측이 공천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정희 대표 사무실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데도 그렇게 결정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과거 성추행 경력이 있고, 민주당의 성남시장 인수위 대변인을 했던 모 후보를 성남지역에 공천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자본가 정당들의 전유물로만 알았던 추악한 행위들이 반MB 선거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있는 것이다. 야권연대를 통해 의석 확보만 된다면 그 정도는 감내하고 가겠다는 것이다.

야권연대와 단절하고 우리 노동자들 스스로의 투쟁으로 돌파하자!

이것이 국참당이라는 자본가 정당과 함께 하면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공식적으로 내팽개친 지불과 넉 달도 안 되어 일어난 사건들이다. 이러한 세력들이 의회에 들어가고 공동정부를 구성한다고 해서 노동자의 삶이 달라지겠는가. 그것도 IMF 이후 온갖 노동악법을 통과시키고 정리해고, 비정규직 양산으로 노동자들을 공격했던 세력들에게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는 것은 두 번, 세 번 속는 것이다.

통진당은 후보를 내지 않는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한다. 노동자들에게 자본가 정당의 선거운동에 동참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해고자 복직, 노동탄압 문제, 공기업 사유화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며 노동자들을 기만하고 있다. 민주당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공약으로 들고 나왔는데 통진당의 공약도 이와 별차이가 없기 때문에 통진당 입장에선 민주당 선거운동을 하는 데 아무 거리낌이 없을 것이다. 공동정부 구상을 위한 전초전인 총선 야권연대에 노동자들을 끌어들이고 노동자들을 자본가들의 지지부대로 이끄는 이러한 반MB 야권연대가 설사 이번 총선에서 이명박과 새누리당을 누르고 승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노동자들한테 지난 민주당, 열우당의 총선 승리와 뭐가 다르겠는가.

노동자들의 고통과 요구를 민주당과 같은 자본가계급의 한 분파가 해결해줄 수 있다고 속삭이는 통진당 및 야권연대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 노동자들 스스로의 투쟁으로 돌파하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통진당 및 야권연대와 단절하자. **혁명**

노동조합이 자본가 정당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다고?

선거철을 앞두고 노동조합과 정당의 정책연합이 한창이다. 노동조합 표를 몰아줄테니 노동조합이 원하는 정책을 실현시켜달라는 것이다. 노동자계급의 독자적인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이라면 노동조합과 그러한 정당의 정책협약은 굳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노동계급 정당이라면 정책협약이 없더라도 노동계급의 배타적 이해를 대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정책협약이란 대체로 노동조합과 자본가정당 사이의 것 말고 다른 것은 없게 된다. 자본가 정당과의 정책협약은 명백히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자본가 정당에게 표 찍는 행위를 하게 만드는 반노동자적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 스스로의 단결된 투쟁으로 자본에 맞서야 하는 계급투쟁의 현실에서 자본가 정치인들만 쳐다보게 만드는 행위다.

민주노총의 통진당 배타적 지지와 정책협약

민주노총과 통진당은 지난 3월 6일에 민주노총의 10대 입법과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나간다는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민주노총의 10대 우선입법과제는 △파견법 폐지 △노동시간단축 · 일자리 창출 특별법 제정 △근로기준법 개정 △노동조합법 개정 △기간제법 개정 △최저임금법 개정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 △정치자금법 개정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방송법 개정 등이다. 이러한 협약에도 불구하고 통진당이 노동자계급의 이해로부터 멀어져가고 있다는 것,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어 민노당을 만들었지만 국참당과 합당하면서 노동계급 저편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숨길 수 없다.

지난 1월 31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는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통진당 배타적 지지를 추인하려고 시도했지만 정족수 부족으로 좌절된 바 있다. 그러자 민주노총 중집에서는 곧바로 통진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사실상 선언했다. 이에 맞서 311명의 민주노총 대의원들은 2월 27일 선거방침 논의를 위한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요구서를 민주노총 집행부에 제출했고, 3월 22일에 대의원대회가 열린다. 임시 대의원대회 소집 요구자들은 "신자유주의 세력인 국민참여당과 통합한 통합진보당은 노동자 중심의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노총의 조직적 지지 대상이 아니다"는 내용의 선거방침에 대해 의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로선 통진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주장하고 있는 민주노총 집행부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사건들이 나날이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임시대의원 대회가 정족수를 채울 지조차 미지수인 상황이다.

공공운수노조 집회와 정책협약

3월 17일에는 공공운수노조·연맹 주최로 서울역에서 1만명이 모여 △공공운수부문 법제도 개혁 △노동탄압·선진화 정책 분쇄 △노동기본권 쟁취 △민영화 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공공운수부문 비정규직 철폐 등 5대 요구를 정치권에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실제로 집회의 성격은 정치권과의 정책협약을 발표하는 장이었다. 하지만 관성화 되어 있는 대부분의 집회가 그렇듯이 많은 조합원들의 참여에도 불구하고 정책협약 발표는 노동자들과 동떨어진 것으로 비춰졌다. 지도부들이 정당들과 정책협약하고 알아서 해줄 텐데 단순히 집회 참여하고 돌아가는 것 말고 무엇이 더 있겠는가. 긴장감과 투쟁의지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었다.

실제로 통진당과 진보신당은 공공운수노조·연맹과 이러한 정책협약을 맺었다. 그리고 민주당의 경우, 정책협약은 민주노총과 맺는 것이라면서 공공운수노조·연맹과 협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질의서에는 답변을 했다. 공공부문 해고자 문제에 대해서는 인천과 서울의 예를 따르겠다고 하는 등 다른 질문에 대해서도 상투적인 답변들을 보냈다. 민주당의 경우 공공운수노조·연맹이 원하는 것을 일부는 들어줄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도 새누리당이 반대해서 안 된다면 그만인 것이다.

과거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인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비정규직 양산하는 데 민주당과 국참당 세력이 앞장서고 한나라당이 뒤에서 밀어준 사실을 잊을 수가 있는가.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죽음으로 내몰았던 정권의 후예들에게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버젓이 정책협약을 제안하는 조합 관료들에 대해 현장활동가들은 조합원들 사이에서 단호한 규탄과 반대 운동을 조직해야 한다.

노동조합이 야권연대를 지지한다? 노사협조주의와 뭐가 다른가

조합관료들은 정치인들을 상대로 한 노동조합의 표 몰아주기를 '계급투표'로 포장한다. 그러나 노동계급의 계급투표는 자본가 정당과 완전히 단절하고 철저히 노동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세력을 지지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될 수 없다. 민주당은 물론이고 통진당도 계급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날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진보신당도 마찬가지로 의석확보를 위해 야권연대에 매달리고 노동자들의 독자적인 정치적 이해를 대변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관료들이 야권연대를 위시해 배타적 지지를 옹호하는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통제력을 자본가들에게 보여주고, 정치권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 삼기 위해서다.

이러한 관료적이고 부르주아적인 정치세력화에 맞서 노동조합은 자본가 정당과 단절하고 어떠한 지지도 보내선 안 된다. 노동조합이 야권연대를 지지하는 것은 자본가 사측과 손 잡는 노사협조주의와 하등 다를 바 없다. 어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자본가 정당과 손 잡는 야권연대를 지지하는 것이 곧 어용이다. 노동조합은 자본가 정당과 단절해야 한다. **혁명**